

Global Market Report

트럼프 취임 100일과 美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美 신정부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전망 / 4

II. 美 통상·경제정책의 대한민국 영향력 분석 / 17

III. 주요 무역적자 4개국 통상정책 / 22

- 1. 중국 / 25
- 2. 일본 / 29
- 3. 독일 / 32
- 4. 멕시코 / 34

IV. 기타 주요국 반응 / 37

- 1. EU / 38
- 2. 스위스 / 40
- 3. 캐나다 / 41
- 4. 대만 / 42
- 5. 베트남 / 43
- 6. 태국 / 44

요 약

□ 트럼프 취임 100일 통상·경제 공약 평가

- 트럼프 취임 후 “100일 계획(총 28개 공약)” 중 내치·외교·안보 등 전체 공약은 롤러코스터식 행보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평가
 - 특히, 취임 후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실패와 러시아 대선개입 사건 등 행정부의 추진력 제동되어 법안 통과 전무한 상황
 - * (여론조사) 역대 지도자 중 가장 낮은 지지율 40%(53년, 아이젠하워 이후)
 - * (NYT)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말바꾸기 시간, (CNN) 업포와 연막속의 첫 100일
- 통상·경제(하기 8개) 공약은 상당수 번복·미이행·입법 실패로 흑평 불구, 이해관계(통상마찰, 의회) 때문에 온건한 실용 및 현실주의 노선으로 변경
 - TPP 탈퇴 제외한 대부분 통상공약은 주요국과 통상마찰(中 환율조작국 지정, NAFTA 재협상) 우려로 통상 노선 변화
 - * 보호주의 강경파(피터 나바로, 배넌) → 온건파(게리 콘 등)로 통상주도권 변화
 - 법인세 감세 포함한 세제개편안, 국경조정세, 및 인프라 공공분야 투자 등 경제공약은 재정문제 및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의회 통과 애로 전망

< 트럼프 취임 후 100일 경제·통상 공약 이행 평가 >

구분	경제·통상 관련 공약	이행 및 진행현황	평가*
통상	① NAFTA 재협상(또는 탈퇴)	· NAFTA 재협상 계획 발표(4월말 예정) · 재협상 수준과 속도에 대한 비판 제기	관망 ☀️
	② TPP 협상 폐기 선언	· 취임 직후 TPP 폐기 행정명령(1.23) · TPP 대신 양자 무역협정 추진	최상 ☀️
	③ 불공정무역 감시 및 제재 강화	· 무역적자 원인 분석과 제재방안 강구 지시 · 제재 수단에 대해서 논란 분분	관망 ☀️
	④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미중 정상회담 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미지정 · 대중국 강경 정책 완화 조짐	실망 ☁️
경제	① 중산층 감세, 세제 간소화 법안	· 감세안발표(4.26), 연내 의회 통과 불투명	관망 ☀️
	② 미국기업의 해외이전 방지 법안	·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실망 ☁️
	③ 공공 인프라 투자 활성화 법안	· 재원조달 마련 방안 등에서 의회 통과 난항	실망 ☁️
	④ 오바마케어 폐지	· 민주당 및 공화당 강경파 반대로 의회 표결 실패	실망 ☁️

※ KOTRA 자체, 트럼프 100일 공약 28개 중 경제·통상분야 8개 선택 평가

요 약

□ 對한국 영향력 분석

①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비관세 장벽 강화 우려 확대

② 對韓 적자 폭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 통상압박 강화

- (한미FTA) 美측 FTA 재협상에 대한 상이한 통상신호로 불확실성 증가
 - (부정) 방한 펜스부통령 및 로스 상무부 장관 한미 FTA 재검토(Reform) 언급
 - (긍정) 무역장벽보고서(3.31) 한미 FTA 긍정평가 및 상호원인 가능성 제시
 - (돌출) 트럼프대통령 한미 FTA 재협상 및 폐기 발언 → 협상전략 추정
 - * 트럼프 “한국, FTA 재협상 및 폐기 요구와 사드비용 부담” (4.28, Reuter)
 - * (美재무부) 韓에 FTA 재협상 공식 미제의, (韓국방부) 사드비용 부담 불가 원칙
- (비관세장벽) 보호무역주의와 美 우선주의로 산업별 수입규제 크게 증가 및 미국산 우선구매정책 실행에 따른 한국기업의 피해 우려
 - 미국 對韓 수입규제 전체 23건('17. 4월, 반덤핑 16건, 상계관세 7건)
 - * 최근 3년간 수입규제 지속 확대 ('14) 2건 → ('15) 4건 → ('16) 5건
 - 미국산 우선구매법 강화 마련 행정명령 서명('17.4)
 - * 공공조달시 ① 미국산 제품 사용 최대화, ②바이아메리칸법의 편법 및 예외 최소화
- (산업별) 對韓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중심의 통상 압박 강화 및 일부 틈새시장 수혜 전망
 - * (피해)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 / (수혜) IT, 바이오제약, 건설기계

< 2016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억 달러, %) >

순위	품목	대한 무역수지(비중)	대세계 무역수지
1	자동차	-145 (12.3%)	-1,176
2	무선통신기기	-64 (9.1%)	-702
3	자동차부품	-41 (18.4%)	-223
4	백신의약품	-22 (-)	-9
5	석유제품	-21 (8.5%)	248

순위	품목	대한 무역수지(비중)	대세계 무역수지
6	타이어	-13 (15.3%)	-85
7	컴퓨터	-13 (-)	0
8	세탁기	-12 (19.0%)	-63
9	냉장고	-12 (21.1%)	-57
10	SSD	-9 (19.1%)	-47

※ 자료원: 무역협회

요 약

□ 對美 4대 무역흑자국 대응전략

[중국-일본]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기조 순응 적극 협력
[독일-멕시코] 자국 통화정책 유지 및 對美 강경 통상정책 대응

- (중국) 美·中 첫 정상회담 활용, 양국간 통상협력 위한 '100일 계획' 합의하며 환율조작국 지정 및 관세보복을 회피
 - 중국은 미국산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확대와 일부 상품 수입관세 하향 및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 주식 보유한도 증가 등에 합의
- (일본) 美·日 첫 정상회담 활용, '미일 성장·고용 이니셔티브' 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는 대신 자국 통화정책 방어 및 TPP 관철 노력 지속
 - 對美 투자확대를 통해 美·日 우호관계 유지와 동시 EU와의 FTA 및 TPP 부활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가장 적극적 대응
- (독일) EU의 통화정책 특수성 호소와 미국의 수입관세 또는 국경세 등 통상압력에 WTO 제소 등 강력한 대응 시사하면서 양면전략 추진
 - 미국의 독일 환율조작국 비난에 반박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기존의 통화정책 유지, 미국과 양자협정 거부 등 '마이웨이' 지속
- (멕시코) NAFTA 재협상 매우 부정적, 자국이해 침해시 탈퇴 시사 및 對美 수입품 역보복관세 부과 발표, 중국·중남미와 교역확대 추진

□ 기타 주요국 대응전략

- (EU·스위스·캐나다) 기존 양적완화 및 독자적 환율정책 및 통상관련 강경대응
 - (EU)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시 WTO 제소, 독자 환율정책유지 등 강경대응
 - (스위스) 대미투자 확대 지원, 환율 절하위한 외환시장 개입 지속 천명
 - (캐나다) 미국 유제품 관세 부과, 무역전쟁 감수 및 WTO 제소 검토
- (대만·베트남·태국) 對美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통상정책 기조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중국 주도의 RCEP로 역내 무역활성화 대책 강구
 - (대만) 美-台 FTA 추진, 대미투자 확대(폭스콘 70억 달러), 외환시장 미개입
 - (베트남) TPP 대안으로 중국주도 RCEP 적극 참여, EU와 FTA 추진
 - (태국) 미국산 방산물자 수입확대, RCEP 적극 참여, EU와 FTA 추진

□ **[총평]** 트럼프, 취임 후 “100일 계획(총 28개 공약)”중 내치·외교·안보 등 수많은 공약을 번복, 국민·전문가의 저조한 평가를 받음

○ 특히, 취임 후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실패와 러시아 대선개입 사건 등 행정부의 추진력 제동되어 법안 통과 전무한 상황

* (여론조사) 역대 지도자 중 가장 낮은 지지율 40% (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 (NYT)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말바꾸기 시간, (CNN) 업포와 연막속의 첫 100일

- 취임 100일 전 성과부재를 인식, 4월 내 다양한 행정명령 및 개혁안을 발표·예고했으나 추가조치 및 의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 (통상) 미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3.31), 바이아메리칸 행정명령(4.18), 철강 수입 국가안보 차원 검토 행정명령(4.22) 등

* (경제) 세제개혁안 발표(4.26), 오바마케어 폐지 재추진

< 트럼프 취임 후 100일 계획: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유권자와의 약속’ >

구분	공약	구분	공약
경제	① 중산층 감세, 세제 간소화 법안	통상	① NAFTA 재협상(또는 탈퇴)
	② 미국기업의 해외이전 방지 법안		② TPP 협상 폐기 선언
	③ 공공 인프라 투자 활성화 법안		③ 불공정무역 감시 및 제재 강화
	④ 오바마케어 폐지		④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부패 청산	① 의원 임기 제한 헌법 수정안	안보	① ‘안식처 도시’에 연방정부 지원 중단
	② 연방 직원 고용 동결		② 불법 이민자 200만 명 추방
	③ 규정 1개 만들면 기존규정 2개 없애기		③ 이민자 수용 중지 및 심사 강화
	④ 연방정부 인사 5년간 정부 로비 제한		④ 불법이민자법 실시(멕시코 국경 장벽)
	⑤ 행정관료의 외국 정부 편에서의 로비 금지		⑤ 지역 사회 안전법 재검토
	⑥ 외국 로비스트의 美 선거자금 모금 금지		⑥ 국가안보법 복원 및 군사 투자 확대
	⑦ 부패청산법 시행	복지	① 학교 선택권과 교육기회 관련 법안
에너지· 인프라	① 에너지 생산제한 해제	행정	② 육아·노인복지법
	②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		① 오바마 정부의 위험 집행 조치 등 취소
	③ UN 기후변화 프로그램 자금 납부 중단		② 스칼리아 후임 대법관 지명

- **[통상·경제]** 트럼프, 취임 후 통상·경제 공약 상당수 번복·미이행·입법 실패로 혹평, 현실 정치에 적응하며 현실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변경
 - (통상·환율)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유지하나 선거 전 공약보다 온건한 수준
 - 트럼프는 NAFTA 재협상 또는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본격적인 재협상은 연말로 연기되었으며, 논란이 되었던 환율, ISD 문제제기가 누락되는 등 온건한 수준의 협상 전망
 - 트럼프는 취임 직후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1.23)했으나, 일본 등 가입국들이 '양보'를 할 경우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 상존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4.14) 미국의 대중 적자 감소를 위한 '미-중 100일 계획' 합의, 농산물·금융 등 부분적인 성과로 만족
 - 외국의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고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 단,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조사하는 행정명령 서명, 향후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적자국에 통상압력을 가할 가능성
 - (경제) 트럼프 최우선 공약인 세제개혁 실현여부 불확실, 오바마케어 폐지 실패로 트럼프 리더십에 큰 타격
 - 트럼프의 핵심 경제 정책인 중산층 감세, 법인세 인하, 미국의 해외이전 방지 및 공공인프라 투자는 대대적인 세제개혁 없이 달성 불가
 - 그러나 소득세·법인세 감세 손실을 만회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의회에서 난항 전망, 단기간에 세제개혁안을 관철할 가능성 낮음
 - 현지 주요언론은 트럼프의 주요 대선공약이자 1호 입법안인 오바마케어 대체 실패가 트럼프 리더십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

- (실용노선) ‘즉흥적인 막무가내’에서 실용·현실주의 노선으로 극적 전환
 - 정계 경험이 없었던 트럼프, 후보로써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즉흥적으로 발언했으나 **무리성 공약을 번복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정책 선회**
 - * 예) 중국 환율조작국 미지정, 시리아 군사 개입, NATO 무용론 철회 등
 - 취임 초반에는 배넌, 나바로 등 트럼프의 반기득권 이미지를 형성한 선거캠프 보좌진이 권력을 잡았으나 최근에는 전통적 워싱턴의 경제 외교 정책을 옹호하는 게리 콘 등 **실용파들이 트럼프의 측근으로 포진**
 - 주요 언론은 최근 주요 정책에 대한 번복은 정계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몰랐던 사실을 배우고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분석, 향후 덜 독단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 시사

< 트럼프 취임 후 100일 경제·통상 공약 이행 평가 >

구분	경제·통상 관련 공약내용	이행성과	평가*
통상	① NAFTA 재협상(또는 탈퇴)	· NAFTA 재협상 계획 발표(4월말 예정) · 재협상 수준과 속도에 대한 비판 제기	관망 
	② TPP 협상 폐기 선언	· 취임 직후 TPP 폐기 행정명령(1.23) · TPP 대신 양자 무역협정 추진	최상 
	③ 불공정무역 감시 및 제재 강화	· 무역적자 원인 분석과 제재방안 강구 지시 · 제재 수단에 대해서 논란 분분	관망 
	④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미중 정상회담 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미지정 · 대중국 강경 정책 완화 조짐	실망 
경제	① 중산층 감세, 세제 간소화 법안	· 감세안발표(4.26), 연내 의회 통과 불투명	관망 
	② 미국기업의 해외이전 방지 법안	·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실망 
	③ 공공 인프라 투자 활성화 법안	· 재원조달 마련 방안 등에서 의회 통과 난항	실망 
	④ 오바마케어 폐지	· 민주당 및 공화당 강경파 반대로 의회 표결 실패	실망 

□ [통상 관련 공약] 선거 전 공약보다 온건한 수준의 이행

① NAFTA 재협상 또는 탈퇴..... 관망

- (공약)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NAFTA 재협상에 대해 언급하며 상대국이 공정한 협상을 거부한다면 협정 폐기 가능성 시사
 - * (NAFTA 재협상) 당사국의 일방 통보만으로 개시, 180일까지 성과가 없으면 협상 폐지 가능
- (현황) 당선 전 NAFTA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 정부는 온건한 수준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
 - 최근 USTR이 의회에 제출한 NAFTA 청사진은 기존에 논란이 되어온 환율문제나 투자가-국가제소권(ISD)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누락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
 - * (전미노동자연합) NAFTA 재협상 계획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 ('17.4.4)
- (전망) NAFTA 재협상은 연말이 되어야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② TPP 협상 폐기 선언..... 최상

- (공약)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TPP를 최악의 무역협정이라 비난, 취임 즉시 폐기 공약
- (현황)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TPP 협상 폐기를 공식 선언함.
 - TPP 폐기 후 일본 등 주요 TPP 협상국들과 개별 양자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고려 중
 - 미국은 TPP 같은 다자협정보다 양자협정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전망) TPP 폐기 공약 번복 가능성은 작으나, TPP 가입국들이 중국 주도 RCEP를 추진하여 미국이 아태지역 통상 주도권을 상실할 경우 공약 번복 가능
 - * 일본 등 협상국들이 미국에게 TPP를 되살리는 명분(양보)을 줄 경우 TPP 협상재개 가능

③ 불공정 무역 감시 및 제재 강화..... 관망

- (공약) 미국 상무부와 USTR을 통해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국 불공정 무역 조사 및 국내, 국제법을 통해 수정
- (현황) 무역적자 원인분석 및 반덤핑·상계관세 집행 강화 목적 행정명령 서명(3.31), 철강 수입활동이 미국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관련 행정명령 서명(4.22)
 - (무역적자) 미국의 무역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국가별로 재분석 및 원인 분석, 6월 말까지 미국의 무역적자의 원인을 아래 일곱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할 것이라고 밝힘(3.31)
 - * ① 무역 부정행위 ② 양자무역협정 실패 ③ 미국의 집행 부재 ④ 환율 불균형 ⑤ WTO의 규제 ⑥ 구조적인 공급 과잉 ⑦ 불균형한 무역장벽
 -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의 집행 강화 및 집행방향 개선
 - * 로스, 수입업자들이 반덤핑·상계관세 부담 주체를 없애는 방법 등으로 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이런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발언
 - (무역확대법 232조) 트럼프, 철강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지 조사하는 행정명령 서명, 상무부는 270일 이내로 철강 수입활동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평가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전망
 - * 로스, 철강 외 반도체, 조선, 알루미늄 산업도 232조에 의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4.25)
- (전망) 무역적자 및 철강 조사 완료 후 필요 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압력 조치를 취할 예정
 - 상무부, 미국이 특정 무역상대국과의 상품·서비스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원인을 분석한 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평가할 경우 대통령은 15일 내로 무역조정정책을 시행 가능
 - * 그러나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어 판결 여부는 불투명

④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실망

- (공약) 재무부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교역국의 환율 조작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시,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
- (현황) 재무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을 포함한 6개국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에 포함, 환율조작국 미지정
 - '16.10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포함 동일 6개국을 같은 사유로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포함시킨 바 있음.

< 재무부 환율 감시대상국 평가 >

국 가	대미무역흑자 (십억 달러)	경상수지 (GDP대비 %)	외환 순매입 (GDP대비 %)	전년대비 평가
중 국	347.0	1.8	-3.9	동일 (1건)
일 본	68.9	3.8	0.0	동일 (2건)
독 일	64.9	8.3	-	동일 (2건)
한 국	27.7	7.0	-0.5	동일 (2건)
스위스	13.7	10.7	10.0	동일 (2건)
대 만*	13.3	13.4	1.8	2건→1건

* 자료원: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S.

- 트럼프, 미중 회담(4.7) 및 100일 계획 체결 후 기존 반중 통상·무역정책 전환, 중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동반 발전 강조
 - * 트럼프, “중국이 우리를 돕는데 왜 무역전쟁이 필요한가”라 언급
- (전망) 4월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으나, 미 정부는 주요 무역국의 환율정책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지적, 특히 6개 관찰국의 환율정책 모니터링 지속
 - 중국이 일편향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조작’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려움.
 - * 그러나 향후 신정부는 환율 불균형(Currency Misalignment) 혹은 저평가(Undervaluation)등의 단어를 써서 중국 및 주요교역국을 압박할 가능성

< 주요국 환율정책 비교분석 >

-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중국·대만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반면 일본·독일·스위스는 기존 저금리·양적완화 통화정책 유지
-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1조 달러를 외환시장에 투입, 대만은 환율조작국 지적을 의식하여 외환시장 개입 자제 중
 - 일본은 양적완화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독일·스위스는 기존 마이너스 금리·양적완화 정책 유지 선언
 - *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프랑 고평가 해소를 위해 적극 외환시장 개입 선언
- (기타 주요국)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꺼려하는 신흥국 환율정책은 미국의 요구와 일치, 선진국은 독자노선 추진
-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등 신흥국은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금리인상·외환시장 개입, 미국의 의지와 일치
 - 유럽 국가들의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등 팽창적 통화정책 선호

< 주요국 환율정책 요약 >

구분	국가	내용
환율 조작 관찰국	중국	· 1조 달러 투입을 통해 위안화 방어, 시장친화 환율시스템 도입
	일본	· 통화정책 적극 해명(디플레 해소가 목적, 엔화 약세 유도 없음)
	독일	·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 지속
	대만	·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환율시장 개입 최대한 자제
	스위스	· 스위스 프랑 고평가 해소를 위해 외환시장 적극 개입
비 관찰국 (신흥국)	베트남	· 동화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 적극 개입
	말련	· 링깃화 폭락이 우려되나 외환시장 개입 자제
	인도	· 루피화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금리 연속 인상
	태국	· 변동환율제를 유지하며 외환시장 개입 자제
	브라질	· 변동성이 너무 커질 경우에만 외환시장 개입
	사우디	· 달러와 페그제를 운영하여 환율 이슈 없음
비 관찰국 (선진국)	캐나다	· 저금리 정책 유지, 미국과 환율마찰 없음을 강조
	프랑스	·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노선에 적극 찬성
	이탈리아	·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노선에 적극 찬성

□ [경제 공약] 경제공약의 핵심인 세제개혁 추진 중이나 실행 불투명

- ① 중산층·법인 감세, 세제 간소화관망☀️
- (공약) 법인세 감소(35%→15%), 중산층 세제 간소화, 상속세 폐지, 송금세(Repatriation tax) 10% 세율 적용 등 폭넓은 세제개혁을 공약
 - (현황) 백악관,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세제개혁 2017」 발표(4.26)
 - (소득세) 중산층 가계의 소득세 부담 완화, 세제 간소화
 - 상속세를 폐지하며, 기본소득공제 상한 금액을 현재 수준의 2배로 인상하여 중산층 가계 부담을 경감
 - 최고세율 인하(39.6%→35%), 현행 7개로 구분된 세율 구간을 3개 구간으로 간소화(10%, 20%, 35%)
 - (법인세) 미국 법인세를 최저 수준으로 인하
 - 현행 법인세율 35%를 세계 최하 수준인 15%로 인하
 - 미국기업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의 해외유보금을 미국으로 송금 시 일시적 세금 감면 제공(세율은 미공개)
 - 법인세 제도를 현행 글로벌 과세에서 영토주의 과세 제도로 전환
 - (전망) 대규모 감세로 인한 국가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하여 의회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전망
 - 법인세율 인하로 향후 10년간 최소 2.4조~4조 달러의 세수 축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
 - 트럼프 정부는 감세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가 자연스럽게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 * 경제가 연평균 추가로 0.9% 성장해야 '세수 중립' 이 가능하나 실제 추가 성장은 0.4% 미만일 것이라는 분석
 - 민주당 전원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공화당 소속 매파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

② 공공인프라 투자 활성화 실망

- (공약)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 달러를 세수 증가 없이 공공인프라에 투자
 - 향후 10년(2016~25) 동안 노후 공공인프라 개·보수 및 신설을 위해 총 3조 3천억 달러가 필요하나, 예상투자 금액은 1조 8천억 달러에 그쳐 최소 1조 4천억 달러의 투자 부족이 발생

< 미국 공공인프라 건설 수요 및 투자 (단위: 10억 달러) >

기간	구분	육상교통	상하수도	전력	공항	수로/항만	전체
2016 ~2025	투자수요	2,042	150	934	157	37	3,320
	예상투자	941	45	757	115	22	1,880
	투자부족	1,101	105	177	42	15	1,440
2016 ~2040	투자수요	7,646	204	2,458	376	112	10,796
	예상투자	3,312	52	1,893	288	69	5,614
	투자부족	4,334	152	565	88	43	5,182

*자료원: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ASCE)

- (자금조달)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지분투자 총액의 82%를 비과세로 전환, 국가인프라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Bank)을 설립하고 인프라 채권을 발행하여 민간 및 해외자본을 유치
- (바이아메리카) 인프라사업에 미국기업의 참여를 우선하는 『바이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을 강화하여 경제효과가 자국기업에 돌아가도록 조치하겠다고 공언
 - * 트럼프, 바이아메리칸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4.18)
- (현황) 트럼프는 상·하원 합동연설(2.28)에서 인프라 관련 법을 의회에 제출하고 재확인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전략 無
 - * 대통령 예산·세제개혁에 인프라 자금 조달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음
- (전망) 트럼프, 교통부를 통해 여름까지 인프라 계획을 공개할 예정
 - * 트럼프, 조속한 시일 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달성 재공약(4.18)

③ 공미국기업의 해외이전 방지 법안 실망

- (공약) 다른 국가로 시설을 이전하고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아웃소싱 및 미국 노동자 해고를 방지
- (현황·전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개혁 도입 시 구체적인 전략 제시 공약
 - 국경조정세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나 WTO 규정에 위배되며, EU, 독일이 도입 시 WTO 제소를 예고한 상태로 현재 도입 가능성 적음.
 - 당선 전 중국, 멕시코 제품에 각각 45%, 35% 관세 부과를 주장했으나 실행 불가능한 계획으로 사장

④ 오바마케어 폐지 실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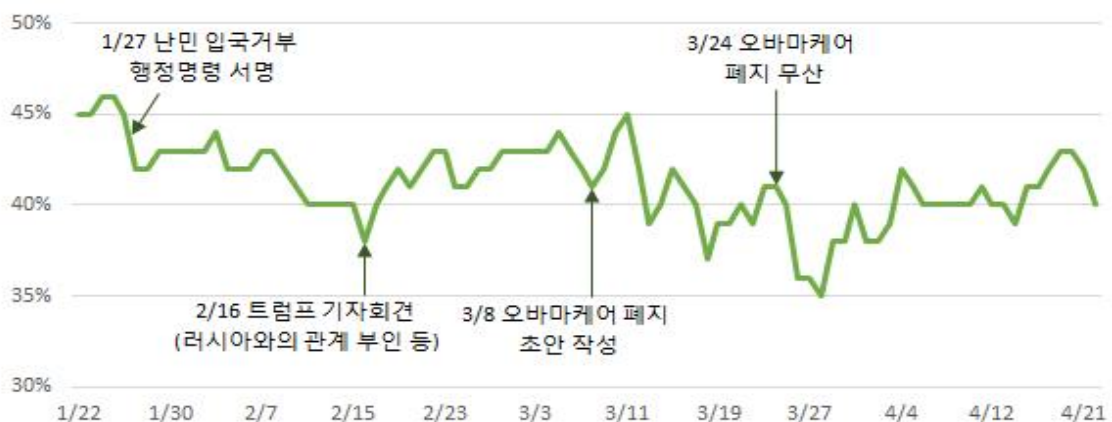
- (공약) 오바마케어 폐지,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고,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자금을 관리하도록 변경(트럼프케어), 식품의약국이 의약품·신약 승인 규제 완화
- (현황) 공화당 강경파 반대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의회 표결 좌절
 -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설득 실패
 - * 프리덤 코커스, 트럼프케어를 “무늬만 개정한 오바마케어 라이트” 라고 비난
 - 트럼프의 1차 대선공약이자 1호 입법안인 오바마케어 대체 실패는 트럼프 리더십에 러시아 대선 개입과 함께 최대 치명타를 입힌 공약임
- (전망) 의회 표결 실패 후 한 달 만에 재표결 추진
 - 트럼프, 공화당 내 반대파를 설득하고 대안인 프럼프케어 법안도 수정·보완, 5월초 오바마케어 폐지 표결 재추진
 - 그러나 민주당이 트럼프케어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 강경파 설득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서 의회 가결 여부 불투명

- **[현지평가]** 트럼프, 취임 90일 사상 최저 지지율 기록, 대다수 언론·연구소는 트럼프 경제정책에 회의적, 성과 부재를 지적하면서 역대 대통령 중 최악으로 평가

① 미국 국민

- (국정지지율) 트럼프, 취임 90일 후 낮은 국정지지율 기록
 - 트럼프의 국정지지율은 40%, 동 시기 전임 오바마(63%), 조지 부시(53%)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 크게 떨어짐(갤럽)
 - *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최악의 '취임 100일 성적표' 기록
 - * 지지율이 35%까지 하락했으나 시리아 공격, 북핵 강경대응 등으로 소폭 상승
- (여론조사) 트럼프 국정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C 이하(24%가 F), 39%만이 긍정 평가(A 또는 B)를 내림(폴리티코)
 - 테러와의 전쟁, 고용창출, 경제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음
 - * 시리아 폭격 등으로 국민들 49%가 '테러와의 전쟁' 분야에서 A,B 점수 부여
 - * 트럼프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경제, 고용창출 분야에서는 각 39%가 트럼프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 건강보험, 기후변화, 적폐청산 등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음.
 - * 오바마케어 실패로 인하여 건강보험 지지율(25%)이 가장 낮았음.

< 취임 후 트럼프 지지율 추세(갤럽 여론 조사) >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대표 >

일시	내용
1월 20일	취임
	오바마케어(ACA) 축소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
1월 23일	미국의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1월 25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
1월 27일	난민 인정 프로그램 중단 및 입국거부 행정명령 서명
2월 10일	일본 아베 총리와 양자회담: “미-일 성장과 고용 이니셔티브” 합의
3월 1일	2017년 무역정책 아젠다 발표: 한미 FTA를 “무역적자 급증의 원인”으로 평가
3월 8일	오바마케어(ACA) 폐지에 대한 초안 작성 개시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처방약 가격 인하안에 대해 논의
3월 16일	2018년 대통령 예산안 제출: 국방예산 10% 증가 및 기타 예산 삭감 제안
3월 17일	독일 메르켈 총리와 양자회담: 독일의 과도한 무역흑자 및 ‘안보 무임승차론’ 강조
3월 24일	오바마케어(ACA) 폐지 법안 의회 투표를 무기한 연기(입법 실패) - 트럼프 리더십이 오바마케어 대체 실패로 큰 타격 입음
3월 31일	미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에 서명: 90일 내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분석
4월 6-7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 양자회담: 미국의 대중 적자 감소를 위한 ‘100일 계획’ 합의
4월 6일	시리아에 미사일 발사
4월 14일	중국 환율조작국 미지정(기존 보고서 상 환율관찰국 6개국 지위 유지)
4월 18일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Buy American) 관련 행정명령 서명
4월 20일	철강 수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한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 서명
4월 26일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세제개혁 2017’ 발표

② 주요언론 평가

- (워싱턴포스트)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지지율(40%)을 기록 중인 대통령 지지율이 트럼프정부 100일을 규정하는 지표라고 비판적 논평
 - 특히 트럼프의 주요 대선공약이자 1호 입법안인 오바마케어 대체 실패 및 러시아 대선 개입이 트럼프 리더십에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
- (파이낸셜타임즈) 백악관 내 노선 경쟁에서 공화당 주류 온건파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 보호무역 공약 후퇴의 원인이라고 보도함.
 - 월스트리트 출신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이 트럼프의 신임을 얻어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과격한 통상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분석
- (폴리티코) 법인세 인하, 인프라 투자 등 관련 법안 통과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노믹스 전망 불투명**, ‘트럼프렐리’의 끝을 전망
- (NYT) 트럼프의 말바꾸기 및 공약 번복을 지적, “말바꾸기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 (CNN) 트럼프, 저조한 취임 초기 성적을 감추기 위해 ‘**엄포와 연막속**’의 첫 100일 맞고 있다고 보도

③ 경제연구소

- (브루킹스) 트럼프가 수많은 정책을 변경했으나 몇몇 기업 지원 및 환경 규제 철폐 외 **성과가 없음**을 비판
 - * 브루킹스 연구소: 전세계 싱크탱크 1위 연구소
 - 특히 최대 경제 이슈인 **세계개혁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으며**, 10년 후에 만료될 일시적 감세 조치에 그칠 것이라 전망
- (피터슨연구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
 - 보호무역 정책을 지속한다면 미국 민간분야에서 48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
 - 중국과의 ‘100일 계획’을 통해 단기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냄.

II

美 통상 · 경제정책의 대한민국 영향력 분석

□ [총평]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 비관세 장벽 강화 가능성 우려, 대한 적자폭이 큰 자동차 · 철강 ·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강경한 통상압박 전망

- (한미 FTA) 미국, 한미 FTA 관련 상이한 전망 제시, 재협상 가능성 우려
 - USTR은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 한미 FTA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나(3.31), 펜스 부통령은 한미 FTA의 '개정' 요청
 - (돌출)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및 폐기 발언 → 협상전략으로 추정
 - * 트럼프 "한국, FTA 재협상 및 폐기 요구와 사드비용 부담" (4.27, Reuter)
 - * (美재무부) 韓에 FTA 재협상 공식 미제의, (韓국방부) 사드비용 부담 불가 원칙
 - 환율조작국·NAFTA 사례와 같이 미국이 기존 공약보다 온건한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 서비스시장 개방, 위생검역 장벽 등 일부 조항에서 이행 강화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 (비관세장벽) 미국 수입규제 동향 및 최근 바이아메리칸·철강 관련 행정명령 모니터링 필요
 -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완화되어도 러스트벨트 지지자들을 위해 철강산업 등 특정 산업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 높음.
 - *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23건 중 철강금속이 18건, 향후 증가할 가능성 다대
 - 최근 트럼프는 미국산 제품 사용을 최대화하는 바이아메리칸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4.18) 및 철강수입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 지시(4.22), 관련 행정명령 예의주시 필요
- (산업별 영향)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와 고용유발효과가 큰 자동차 · 철강산업 · 전기전자 위주로 통상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미국에서 자동차 수입관세(2.5%)가 부활할 경우 현대·기아차의 가격이 인상되어 미국 브랜드 대비 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
 - (철강) 철강산업은 트럼프 지지 지역인 러스트벨트 주요산업, 우리 철강 및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의 반덤핑 제소 지속 증가 전망
 - (전기·전자) 대한 적자가 높고 대부분의 경쟁사가 미국브랜드인 세탁기, 냉장고 사업부문에 무역제재 강화 전망

□ **[한미 FTA] 한미 FTA 관련 엇갈린 전망이 제기되어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한미 FTA 재협상 우려**

- 펜스 부통령, 방한 시 한미 FTA의 개정(Reform)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비판
 - * 미 상공회의소 연설(4.17)에서 “한미 FTA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비관세 장벽이 많다, 한미 FTA의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발언
- 트럼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폐기 가능성 언급
 - * 트럼프, “끔찍한” 한미 FTA를 재협상 또는 종료하기를 원한다고 발표(4.27)
- USTR은 ‘국별무역장벽보고서’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 평가
 - * 2017 Nation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3.31)

<NTE 국별무역장벽보고서 한미 FTA 평가>

- (한미 FTA) 美 대한민국 교역증가 및 시장접근성 개선으로 긍정적 평가
 -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암시했던 ‘무역정책 어젠다’의 평가와 달리
규제의 투명성 개선, 지재권 보호 강화, 비관세장벽 완화,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업체의 한국 시장접근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 *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17.3.1)

- (한미 FTA 이행) 그러나 USTR은 동 보고서에서 약가 투명성·
법률시장 개방·금융 규제완화 개선 요청을 언급
 - (약가 투명성) 보건복지부의 약가 정책 일부 내용이 불투명하고
예측이 어려워 미국 수출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
 - *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바이오시밀러 약가 우대,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 인하율 감면 등
 - (법률시장 개방) “법률시장 3단계”의 이행 촉구
 - * (1단계) 미국 로펌 한국 대표사무소 설립 허용 (2단계) FTA 발표 2년 이내 한-미
로펌 제휴 허용 (3단계) FTA 발표 5년 이내 한-미 합작투자기업 설립 허용
 - (금융 규제완화) 개인정보보호법의 까다로운 정보 국외 이전 요건을
지적, 외국 서비스제공업체의 부담 가중 호소

□ [비관세장벽] 수입규제 동향, 바이아메리칸 조항·철강 등 최신 행정명령 예의주시 필요

- (개요) 보호무역주의 공약으로 러스트벨트 지역 제조업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트럼프, 철강 등 주요 제조업 산업 보호 정책으로 지지자들 보답 필요
- (수입규제 증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될 경우 대한 수입규제 증가 예상
 - (현황) '17.4월 기준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23건으로 반덤핑 16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
 - * 최근 3년간 수입규제가 11건이며 지속 증가 추세 ('14. 2건, '15. 4건, '16. 5건)
- (철강수입 조사) 무역확대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지 조사 개시
 - * 로스, 철강 외 반도체, 조선, 알루미늄 산업도 232조에 의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4.25)
- (바이아메리칸) 미국산 우선구매 정책(바이아메리칸)이 포함된 인프라 투자 관련 입법 동향에 예의주시할 필요
 -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아메리칸(미국산 구매 우선법)」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4.18)
 - * 연방 조달관행(제도)을 전면 재검토하여 ①미국산 제품 사용을 최대화하고, ②바이아메리칸 법의 편법 및 예외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지시
 - * 현재로서는 WTO 조달협정(GPA)과 한미 FTA 정부조달 규정에 따라 일정 이상 금액의 미국 공공조달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참여 가능
- (무역적자 조사) 무역적자 원인분석 및 반덤핑·상계관세 집행 강화 목적 행정명령 서명(3.31)
 - 한국의 대미 흑자가 높은 자동차·철강·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압박을 강화할 가능성 다대

□ **[피해산업]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와 고용유발효과가 큰 자동차·전기전자·철강산업 위주로 통상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

< 2016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상위 10대 품목(HS 4단위/억 달러) >

순위	품목	대한 무역수지(비중)	대세계 무역수지	순위	품목	대한 무역수지(비중)	대세계 무역수지
1	자동차	-145 (12.3%)	-1,176	6	타이어	-13 (15.3%)	-85
2	무선통신기기	-64 (9.1%)	-702	7	컴퓨터	-13 (-)	0
3	자동차부품	-41 (18.4%)	-223	8	세탁기	-12 (19.0%)	-63
4	백신의약품	-22 (-)	-9	9	냉장고	-12 (21.1%)	-57
5	석유제품	-21 (8.5%)	248	10	SSD	-9 (19.1%)	-47

① **(자동차)**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 또는 개정 시 FTA 체결 후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한 자동차·자동차부품에 관세를 요구할 가능성 높음.

- **(관세부활)** 미국에서 자동차 수입관세(2.5%)가 부활할 경우 현대·기아차의 가격이 인상되어 미국 브랜드 대비 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
* 단, 현대·기아차의 판매물량 중 대미 수출물량은 각각 6.8%, 11.0%로 타격은 제한적

- **(국경조정세)** 현재 확률은 낮으나 국경조정세 도입 시 현대차 미국 판매가격이 약 8% 인상될 전망

* 또한 미국이 멕시코에 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기업 판매전략 수정이 불가피

② **(철강)** 우리 철강 기업, 한미 FTA 및 미국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증가에 노출

- **(수입규제 동향)** 2013년부터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에 조사 개시, 2014-16년 대부분 국내기업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판정

*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에 '16년 2~3분기에 각각 수입규제조치 발표

* 규제 조치('16.10) 후 대미 판재류 수출물량, 전년대비 44.2% 감소

- **(전망)** 철강산업은 트럼프 지지 지역인 러스트벨트 주요산업, 우리 철강 및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의 반덤핑 제소 지속 증가 전망

- 특히 미국이 자동차 산업의 무역규제를 강화할 경우 2차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트럼프의 최신 행정명령*도 예의주시 필요

* 철강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지 조사 지시(4.22)

③ (전기·전자) 대한 적자가 높고 대부분의 경쟁사가 미국브랜드인 세탁기, 냉장고 사업부문에 무역제재 강화 전망

< 미국 세탁기, 냉장고 점유율(단위: %) >

구분		세탁기		냉장고	
		2014	2015	2014	2015
미국 가전시장 점유율 (금액기준)	Whirlpool(미국)	18.7	19.7	14.0	14.3
	LG	17.1	15.5	14.4	14.8
	Samsung	11.8	15.0	13.7	15.6
	Maytag(미국)	15.5	14.0	-	-
	Kenmore(미국)	13.8	13.2	14.9	13.4
	GE(미국)	12.9	12.4	14.6	15.7
	Frigidaire(유럽)	-	-	11.2	11.6
	Others	10.3	10.2	17.2	14.6

* 자료원: 나이스신용평가

- 삼성, LG 가전제품 현지생산 체제 검토 중이나 미국 인건비는 멕시코의 6배, 베트남의 10배인 이유로 공장 설립에 난항
- 가전 산업의 마진은 5%, 자동화를 해도 높은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음

□ [수혜산업] 주요공약을 이행 시 인프라, IT, 바이오·제약산업 수혜

- (인프라)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성사될 경우 우리 건설사 및 관련 기자재 기업들에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가능성
- 인프라 투자 확대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나 인프라 투자는 트럼프의 핵심 경제공약이므로 지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
- (IT) 美연방정부의 정보통신 시스템 효율화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비생산적 IT 규제 완화'를 목표
- 미국 내 사회기반 시설과 중요 시스템 안보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선정, 사이버보안, 국경 감시, 데이터 분석 관련 우리 기업에게 진출 기회
- (바이오·제약)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약가 인하 방안으로 의약품 수입 확대와 인허가 규제 간소화 등 의료시장에 경쟁 도입 계획
- 미국 식약청이 바이오복제약 승인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확대 전망

Ⅲ

대미 4대 무역흑자국 대응전략

□ [총평] 중국·일본은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독일·멕시코는 강경 대응 예고

- (중국) 미국의 대중 적자 감축을 위한 ‘100일 계획’ 추진을 합의하고 대미 투자 확대, 외환자유화 및 시장친화적인 환율시스템 채택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미국과의 마찰 최소화해 집중
 - 중미 회담을 통해 농산물, 금융 등 부분적 양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고 환율조작국 지정도 막았다는 호평
- (일본) 미국에 ‘미-일 성장과 고용 이니셔티브’ 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는 대신 자국 통화정책을 방어하고 TPP를 관철하려는 노력 지속
 - * 미-일 성장과 고용 이니셔티브 : 미국에 총 4,500억 달러 투자, 일자리 70만 개 창출 약속
 -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EU와의 FTA에 박차를 거는 등 주요 4대국 중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
- (독일) 미국이 수입관세 또는 국경조정세 도입 시 WTO 제소 등 강경대응을 시사
 - 미국의 독일 환율조작국 비난*에 반박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기존 통화정책 유지, 미국과의 양자협정 거부 등 ‘마이웨이’ 지속
 - * 나바로, “독일은 극도로 저평가된 유로화를 통해 미국과 EU 회원국을 착취”라 발언(1.31)
- (멕시코) NAFTA 재협상 시 자국에 이득이 없으면 탈퇴하고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중국·중남미 협력 강화
 - 폐소화 평가절하를 금리인상을 통해 막고 있으나 미 상무부는 폐소화 ‘환율불균형’을 언급, 시정을 요청할 가능성 상존

< 대미 4대 무역흑자국 대응전략 >

국가	통상정책	환율정책
중국	① 미국과 “100일 계획” 추진 합의 - 목적: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감소 ② 대미 투자 확대 - 중국 기업의 투자, 고용 노력 강조 ③ ‘일대일로’ 전략 적극 추진 - 미국, 중동, 동남아 국가의 참여 독려 ④ RCEP 적극 추진 - 미국 TPP탈퇴를 틈타 아태지역 무역 해게모니 장악	① 위안화 평가절하 차단 - 외환보유고 1조 달러 투입 ② 시장친화적 환율시스템 채택 가능성 - 전인대에서 환율 시장화 개혁 중요성 강조
일본	① ‘미·일 성장과 고용 이니셔티브’ 체결 - 미국에 4,500억 달러 투자, 70만 명 고용 ② 대미 투자 확대 - 토요타, 소프트뱅크 등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 발표 ③ 유럽과 FTA 추진(EPA), TPP 부활 추진 - 올해 EU와 연내 합의를 목표 - TPP를 탈퇴한 미국 설득 지속	① 일본의 통화정책 관련 오해해소 노력 - 양적완화의 목적은 엔화 약세가 아닌 디플레이션 해소임을 설명 ② 기존 통화정책 유지 - 2013년 양적완화정책 개시, 2016년 마이너스금리 도입
독일	① 강경 대응 시사 - 미국이 국경세나 국경조정세 도입 시 WTO 제소 등을 통해 대응 전망 ② TTIP: 트럼프가 거절한 TTIP 재시도 추진 - 미국과의 양자 협정은 거부 ③ 폴크스바겐·BMW·BASF 등 주요기업 대미투자 확대 전망	① ECB, 기존 통화정책 유지 - '17년 마이너스 금리 유지 - '18.4월경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② 미국의 환율조작 비난 논리에 반박 - 독일 무역흑자는 독일 경쟁력에 기초, 왜곡된 무역정책의 부산물 아님
멕시코	① NAFTA 탈퇴 가능성 시사 - 원원 관계 구축이 안 될 경우 탈퇴 - 미국제품에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 ② 중남미·중국 협력 확대 - 태평양 동맹국 협력 강화 및 중국 기업 투자유치 적극 지원	① 폐소화 평가절하 방지 노력 지속 - 물가상승 및 외국인 투자 이탈 방지 - '16년부터 3회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 ② 미국의 ‘환율불균형’ 발언 예의주시 - 로스, 통화가치 저평가국에 불균형 시정 요청 가능성 시사

< 주요기업 미국 현지진출 계획 >

국가	기업	업종	내용
중국	푸야오	자동차부품	미국에 약 10억 달러 투자, 향후 수백 명 추가 고용
	GCL	신재생	세계 최대기업 선에디슨 인수, 1억 5,000만 달러 투자
일본	토요타	자동차	향후 5년 100억 달러 투자, 공장 증설 및 400명 고용
	소프트뱅크	IT	향후 4년간 500억 달러 투자
	후지중공업	중공업	인디애나 주 공장 건설 10%(▲4만 대)
	샤프	전자	미국 내 액정패널 제조공장 건설, 70억 달러 투자
	JR 도카이	철도	댈러스-휴스턴 고속철 투자 제안
	닛신보	자동차부품	멕시코 공장 철회 및 미국 신공장 구축
	스바루	자동차	미국 조달 확대
	이스즈	자동차	미국 조달 확대
독일	폴크스바겐	자동차	미국, 멕시코 공장에 동반 투자
	BMW	자동차	신규 공장 설립, 2억 달러 투자
	바이어	화학	향후 6년간 160억 달러를 R&D에 투자 계획
	BASF	화학	공장 생산 확대를 위해 2억 5천만 달러 투자
	Aldi Sued	유통	영업망 구축을 위해 15억 달러 투자
	하리보	식품	신규 공장 설립에 2억 4,200만 달러 투자

1 중국

- (통상 정책) 미국과 '100일 계획' 협의 및 대미 투자 확대로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경협 확대, RCEP 적극 추진으로 시장 다변화 추진
- (환율 정책) 위안화 평가절하 차단을 위해 1조 달러 투입, 최근 시장 친화적인 환율시스템 채택 등 점진적 변화 가능성 시사

□ 통상 정책

① (100일 계획)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100일 계획' 추진

-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을 늘리고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 양방향 무역·투자 대책을 논의할 전망
 - * 월버 로스, “미-중 회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100일 계획”이라고 밝혔음.
- 중국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와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투자자의 주식 보유한도 증가에 합의
 - * 또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를 하향 조정하여 미국제품의 수입을 확대할 전망

< '17.4 미중 마라라고 정상회담 결과 >

	미국	중국	내용
총 합	북핵 협력확인 통상 의제전환	북핵 압력↓, 대화↑ 통상 실질방어	○(美) 북핵, 일부 양보 획득, 통상, 가시성과 실제양보 ○(中) 북핵, 입장전달·美압박 무마, 통상, 선택 양보 실질 방어
무역·통상	선택적 실익 내용은 후퇴	선택적 양보 내용은 선방	100일 계획 통해 무역(대미수입 확대), 투자(대미투자 확대) 등 추진 약속
북 핵	부분 성과	부분 양보	비핵화와 핵개발 포기 위한 양국협력 약속(구체적 합의는 없음)

② (대미 투자 확대) 중국 기업의 투자, 고용 노력 강조

- '16년 중국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 전년도 3배 수준이자 사상 최고인 456억 달러로 집계(Rhodium Group (RHG))
 - *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M&A 급증, 중국기업의 미국 내 장기 유형자산 투자 (누적) 가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초과
- 현재 중국기업의 대미투자 210억 달러가 미국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추가로 70억 달러의 그린필드 투자를 추진할 계획
- 중국, 미국 내 고용 창출 효과 강조
 - * 중국 외교부, “2015년 중국은 미국에 26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힘.

③ (일대일로 전략) 미국, 중동, 동남아 국가의 참여 독려

- 시진핑, 중미 동반성장 강조 및 미국의 '일대일로' 참여 요청(4.8)

< 중국 일대일로 전략 >

- 일대일로 전략: '13.9월 시진핑이 발표한 경제권 구상 전략
 - * '일대' 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권을 의미
 - * '일로' 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상 협력을 기초로 동남아, 서남아, 유럽과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가리킴.

- 중-호주 FTA를 개정해 농업과 인프라,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합의('17.2월), 중-뉴질랜드 FTA 확대 협상 상반기 개최 예정
- 중동, 동남아 국가에 일대일로 전략 참여 제안
 - * '17.3월 중-사우디 정상회담 시 경제무역, 에너지,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35개 MOU(650억 달러 규모)를 체결하는 등 중동국가와 경험확대에 진력
 - * '17.4월 중-미얀마 정상회담에서는 미얀마의 일대일로 참여와 투자, 에너지, 국경도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④ (RCEP) 미국의 TPP 탈퇴 활용, 아태지역 무역 헤게모니 장악 시도

- 미국의 탈퇴로 인한 TPP 무산 후 중국 주도 무역협정인 RCEP가 TPP 대안으로 부상
- 특히 TPP 무산의 최대 피해국인 일본, ASEAN 국가들이 RCEP를 TPP를 대체할 협정으로 인식, 신속히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유인 증가
 - * 타결시킨 관련 공식 언급은 없으나 참여국 다수가 2017년 타결에 공감대 형성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RCEP을 통해 아태지역 국제경제질서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 RCEP 개요 >

대상국	○ ASEAN(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개요	○ '12.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로 RCEP 협상 개시, '13.5월 제1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17.2월 제17차 공식협상 개최 ○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TPP 탈퇴 이후 동아시아 역내경제통합을 위한 아태지역 FTA로 중요성 부각
주요 내용	○ (상품) 높은 자유화 수준을 추구하되 참여국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원칙 하에 공통양허 집중 논의 * 참여 16개국이 단일 상품양허안 방식을 추구하여 합의점 도출에 걸림돌로 작용 ○ (서비스·투자) 최종 개방수준에 대한 이견 축소 및 구체적 기준설정 방안 논의를 위해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고 기반 마련 ※ 참여국별 상황에 따라 RCEP에 대한 세 가지 입장('17.3월) · (제1그룹)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TPP 참여국. TPP 수준의 높은 자유화를 추구 · (제2그룹) 필리핀, 중국, 인도 등 자유화보다 조기합의를 최우선시, 중국, 인도는 자유화에 소극적 · (제3그룹)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대가로 경제협력 요구

□ 환율 정책

① (평가절하 차단) 외환보유고 1조 달러 투입

-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추가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1조 달러를 투입하고 위안화를 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 * 2016년 연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6.6% 하락, 이는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것임.
- 추가로 자국민 외환 매입 통제, 중국 내 외국기업의 해외 송금과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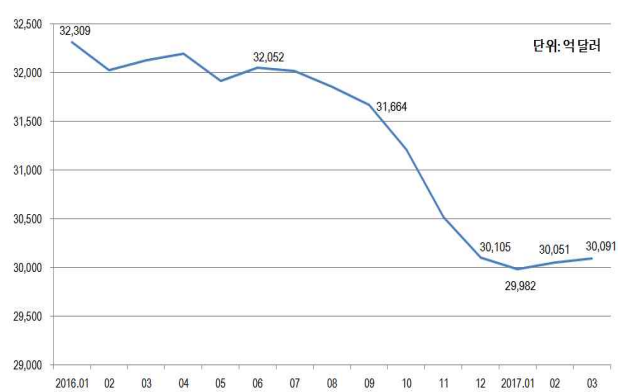
② (환율시스템 변화) 시장친화적 환율시스템 채택 가능성 시사

- 최근 전인대에서 “위안화를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표현 삭제, “환율 시장화 개혁”을 강조
- 외환당국도 향후 환율 범위 확대 등 외환자유화 및 시장 친화적인 환율시스템 채택 등 점진적 변화 가능성 시사

< 위안화 환율 >



< 중국 외환보유고 추이 >



*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2 일본

- (통상 정책)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 및 고용을 약속하는 '미·일 성장과 고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체결 및 대미 투자 확대로 트럼프 신정부 기대에 응하면서 EU와의 FTA 추진으로 신시장 개척
- (환율 정책) 미국에 일본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양적완화·마이너스금리 등 기존 통화정책 유지

□ 통상 정책

① (미·일 성장과 고용 이니셔티브) 미국에 4,500억 달러 투자, 70만 명 고용

- (배경) 일본, 트럼프의 일본 무역흑자 비판에 대한 대응 및 TPP 무산 위기 타개를 위해 '미·일 성장과 고용 이니셔티브' 경제협력 패키지 제시
- (내용) 일본공적연금(GPIF) 동원, 10년 간 미국에 1,500억 달러를 투자, 4,500억 달러 규모의 신시장 창출, 일자리 70만 개 창출
 - * 미국 내 인프라 건설 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70만 개 창출
 - * 美 고속 철도 사업 관련 기술협력 및 대규모 투자
 - * 4대 협력부문(로봇, AI, 사이버보안, 항공우주) 양국 협력 R&D 진행

② (대미 투자 확대) 대규모 대미투자 계획 수립한 기업 다수

- (토요타) 향후 5년 100억 달러 투자, 인디애나 공장 증설 및 400명 신규고용

< 토요타의 미국 사업 투자계획 >

- (1.9) 토요타 사장 '향후 5년간 미국에서의 100억 달러 투자' 공식 발표
 - 동시에 토요타의 13만 6,000명 미국인 고용과 60년간 220억 달러 누적투자를 강조
- (4.10) 미국 켄터키의 완성차 공장에 13억 3천만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

-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 트럼프에게 향후 4년간 500억 달러 투자, 5만 명의 고용창출 약속

③ (일-EU FTA, TPP) 일본-EU FTA를 올해 내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의 TPP 복귀를 촉구

- 자유무역주의자인 아베 총리,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의 대응책으로 **일본과 유럽의 EPA의 연내 합의를 목표**
 - * 일본-유럽 EPA가 성립하면 전 세계 무역액의 약 35%를 대표하는 경제권이 형성
- 일-EU EPA가 일본과 EU 중심의 자유무역체제 구축의 상징이 되어 미국이 TPP 복귀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을 노리고 있음.
 - * 아베, 메르켈과 정상회담(3.20) 시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를 비판
- 또한 일본은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와 **TPP 참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지속 표명하고 있음.**
 - * TPP 발효 시 일본의 실질 GDP는 2.59% 증가해 13.6조엔 규모의 경제 성장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무산 시 차질
 - * ‘마일 성장과 고용 이니셔티브’ 도 미국을 TPP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

□ 환율 정책

① (오해해소 노력) 통화정책 완화는 디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대응임을 강조

-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양적완화정책은 디플레이션 해소가 목적이며 엔화 약세 유도 의도가 없음을 강조
 - 일본은 '11년 이후 엔고 시정을 목적으로 한 시장개입을 자제
 - *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외국환 평형 작업의 실시 상황’에 따르면, 외환시장 개입 금액 제로 상태가 61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음(3.31).
- 미-일 재무장관은 ‘과도한 가치 변동성을 경고’한 G7와 G20의 종전 합의를 유지하는데 의견 일치(3.17)
 - * 이번 합의에 따라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용인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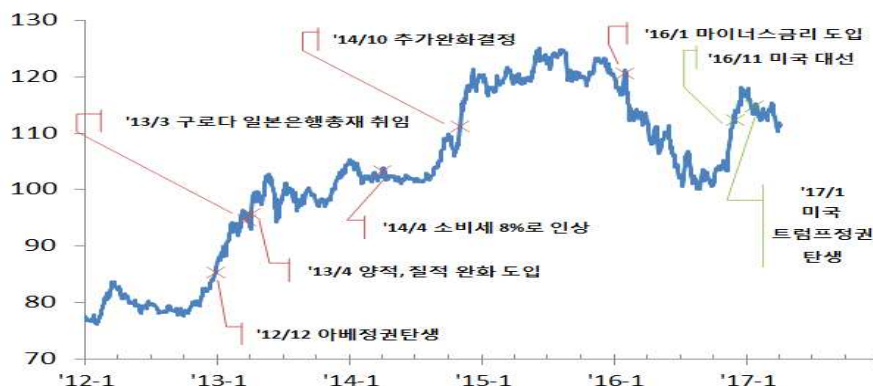
< 미국의 일본 환율 정책 비판에 대한 정부 인사 주요 발언 >

- 아베 총리
 - (2.15) “일본 양적완화 정책은 환율 조작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탈피가 목적임을 미국 측이 이해했다”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 (2.1 중의원 예산위원회) “일본 외 미국, 유럽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② (기존 통화정책 유지) 양적완화정책 · 마이너스금리를 병행하는 팽창적 통화정책을 지속 유지

-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디플레이션 탈출 및 경기부흥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개시
- 2014년 대규모 추가 양적완화정책을 결정한 이후 2016년 마이너스 금리도 도입
- 일본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본 통화정책을 통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
 -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살아나고, 기업 실적이 누적되어 설비투자 확대, 임금인상, 일자리 증가 등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며 내수경제 확대

< 미국 달러/일본 엔 환율 추이(2012.1~2017.3월) >



* 자료원: 일본은행 자료 기반 도쿄무역관 작성

- (통상 정책) 독일 정부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과의 양자협정을 거부하는 반면 독일 기업들은 대미 투자 확대
- (환율 정책) 독일은 ' 16년 사상 최고의 수출입 및 흑자를 기록하며 환율조작국으로 의심받고 있으나 ECB는 기존 정책을 고수 하겠다고 밝힘.

□ 통상 정책

① (강경 대응) 미국이 국경세나 국경조정세 도입할 경우 WTO 제소 등을 통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

- (경제에너지부 대응) WTO 제소를 통해 美 보호무역주의 수입관세 또는 국경조정세 저지가 가능하다 밝힘.
- 또한 미국이 독일 기계나 설비를 필요로 하는데, 독일 제품에 높은 징벌적 수입 관세 또는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미국에 피해가 갈 것이라 경고
 - * 경제부장관, “WTO 규정에는 자동차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미국이 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WTO 제소할 예정” 이라 밝힘(3.17).
 - * 이에 앞서 EU, 중국도 WTO 제소 가능성 제기, 미국이 패소할 경우 총 11개국에 2,200억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FT, 2.28).
-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미국이 제안한 독일의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한 독-미 양국간 솔루션에 대한 제의 거부
 - * 대미 흑자는 경제정책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 수요와 공급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반박
- (외무부) 미국의 독일기업 반덤핑 조사를 ‘위험한 행보’라 비난
 - * 가브리엘(Sigmar Gabriel) 외무부장관, 미국의 독일 철강기업인 잘쯔기터 (Salzgitter AG)와 딜링어 휘테(Dillinger Huette)에 대한 반덤핑조사 비난(3.30)

② (무역협정) TTIP는 옹호했으나 미국과의 양자 협정은 거부, 중·일 협업 강화

- (미국) 독일과 미국간 단독 협상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 EU의 다자간 협상(TTIP) 추진에 주력
 - * 메르켈, 방미 시 트럼프와의 공식 만남에서 양국 경제에 있어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미국 내 독일 기업의 활동 강조, 아울러 독일과 미국과의 개별 무역협정은 불가함을 명확히 표기(3.17)
- (중국) 메르켈 총리, 중국 시진핑과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 지지 강화 논의, G20 정상회의 차원에서의 협력 지속 합의(3.16)
 - * 전 독일 총리 슈뢰더(Gerhard Schroeder)도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해 트럼프가 반중국 통상정책을 구사할 경우 유럽은 이를 기회로 삼아서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 (일-EU FTA) 메르켈,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3.20) 양국간의 관계와 아시아 내 무역정책과 지역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한 일-EU FTA 협상 체결 지원 약속

③ (투자확대) 독일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나 폴크스바겐·BMW·BASF 등 주요기업은 대미투자 확대

- 폴크스바겐·BMW 등 자동차 기업은 미국 현지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아웃소싱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유념, 대대적인 대미 투자 계획 발표
 - * 폴크스바겐, 미국 내 공장에 대한 투자를 증가 발표
 - * BMW, 신규 공장 설립, 5년간 2억 달러 투자, 연간 45만 대 생산 예정
- BASF, 바이어 등 주요기업도 미국 내수경제 활성화·법인세 감면 등을 위해 대미 투자 결정
 - * BASF, 생산 확대를 위해 2억 5,000만 유로 투자 예정
 - * 바이어, 몬산토사 인수, 향후 6년간 160억 달러를 R&D에 투자 예정

□ 환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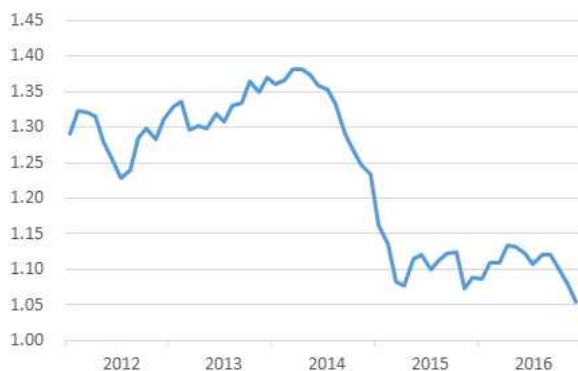
① (기존 통화정책 유지) 2017년 마이너스 금리 유지, 2018년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 (배경) 나바로, “극도로 저평가된 유로화를 통해 독일은 미국은 물론 EU 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 고 발언, 독일의 환율정책을 비난
- (환율정책 변동 불필요) 드라기 총재는 ECB를 통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할 의지
- * ‘17년 금리 동결, ’18년 4월경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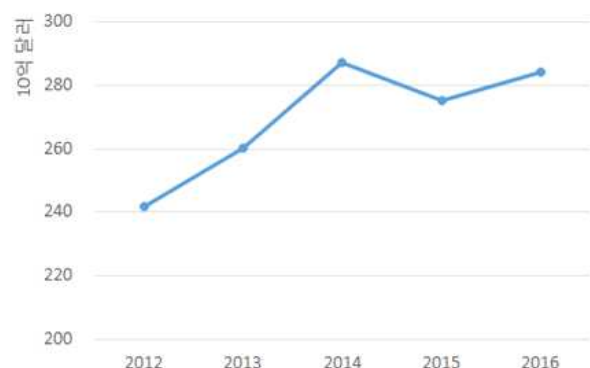
② (미국 주장에 반박) 미국의 환율조작 비난 논리에 반박

- (ECB) 트럼프의 독일에 대한 환율조작국 비난에 대해 반박하고 트럼프의 금융 통제완화에 대해 비판
- * 드라기, “우리는 환율을 조작하지 않으며, ECB의 양적완화정책은 유로존 내 경제의 상이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
- (재무부) 독일 재무부는 독일의 무역흑자는 독일 경제의 경쟁력에 기초하고 타국 수출품 차별 또는 국가보조금 지원 등 어떠한 조작이나 왜곡된 무역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주장

< 유로화 환율 추이(달러 대비) >



< 독일 무역수지 흑자 추이 >



4 멕시코

- **(통상 정책)** 필요시 NAFTA 탈퇴 가능, 수출 비중 80%를 차지하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남미·중국 협력 확대
- **(환율 정책)** 멕시코 당국은 페소화 평가절하 방지 노력을 지속하는 반면 미 상무부는 페소화가 저평가되었다고 언급, '불균형 시정'을 요청할 가능성 상존

□ 통상 정책

① (NAFTA 탈퇴) 재협상의 이득이 없을 경우 탈퇴 가능성도 내비침

- 트럼프 내각과의 협상은 '원-원'의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전제로 실시
 - *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신정부와의 대화는 5가지 전제를 갖고 실시할 것을 언급('17.1.23.)
 - ① 주권 보호, ② 멕시코법 준수, ③ '원-원' 관계 구축, ④ 북미지역 통합, ⑤ 포괄적 협상
- 멕시코는 재협상 시 이득이 없을 경우 NAFTA 탈퇴 및 미국제품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
 - * 멕시코 경제부 장관, NAFTA 재협상에서 멕시코가 이득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탈퇴할 수도 있다고 밝힘(1.21)
 - * 또한 금년 여름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며, NAFTA 협상 실패 시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2.23)

② (중남미·중국 협업 증가) 미국 수출 비중이 80%인 멕시코, 시장 다각화를 위해 태평양 동맹국 및 중국과 협업 확대 희망

- **(태평양동맹)** 멕시코 대통령, '17년 신년사에서 교역대상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의 중요성 언급
 - * 멕시코-아르헨티나 면담 시 MERCOSUR-태평양동맹의 FTA 등 통상협력 방안 논의
- 멕시코 외무부는 최근 다양한 중남미 국가 부처들과 통상협력 관련 접촉이 잦은 상황

○ (중국) 적극적으로 중국기업 투자유치 중

- 트럼프 당선 이후, 멕시코 정부는 중국 내 식품시장 진출 및 중국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

* 누에보레온주는 중국계 자동차기업(미공개)과 투자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짐.

- 중국계 자동차 OEM 기업 멕시코 진출 시작

* BAIC(Beijing Automotive Industry Corporation)은 멕시코 베라크루즈 주에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발표(2017년도 중순)

* 2017년 2월 JAC Motors는 이달고주에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것을 발표,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 4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함.

□ 환율 정책

① (폐소화 평가절하 방어) 금리인상을 통해 폐소화 방어 지속

-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은 '16년 말부터 '17년 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 폐소화 가치절하 및 물가상승 억제 효과

* ('16.11) 5.25% → ('16.12) 5.75% → ('17.2) 6.25% → ('17.3) 6.75%

- 또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외국인 투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및 폐소화 평가절하를 막으려 노력

② (환율불균형) 미 상무부, 멕시코 '환율불균형' 가능성 언급

- 미 상무장관 윌버 로스, 재무부가 4월에 발표할 환율보고서 관련하여 멕시코를 예로 들며 '환율불균형'에 대해 언급

· “불균형은 특정 국가의 환율이 조작되는 경우는 물론 의도치 않은 요인으로 인해서라도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범위 밖에서 움직일 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멕시코 폐소화를 대표 예시로 활용

* 멕시코는 환율을 조작하지 않지만 통화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요청할 가능성 시사

IV

기타 주요국 통상정책

- [총평] 캐나다·유럽은 미 통상·환율 정책에 반기를 든 반면, ASEAN 국가·대만은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는 등 유럽·아시아 국가의 대응이 상이
- (유럽·캐나다) 미국 통상전략에 강경 대응 예고, 대체 시장 발굴에 집중
 - EU·캐나다, 미국의 불공정무역 조치에 WTO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경고, 스위스는 미국 관찰대상국 지정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 * 캐나다는 미국산 유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전쟁도 불사할 각오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EU·캐나다는 CETA 체결, EU는 올해 일본, 멕시코, 메르코수르 등 역외국과 FTA 타결을 목표
 - (아시아) 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순응하는 대응방안 제시, RCEP가 TPP 대안으로 부각
 - 대미 수출 차질을 우려해 미국에게 우호적인 정책 시행
 - * 외환시장 개입 자제 또는 자국통화 평가절하 차단, 미국산 무기 구입 등
 - ASEAN 국가들은 중국 주도 무역협정인 RCEP로 TPP를 대체하는 기조
 - * 대만은 미국의 양자협정 선호를 활용, 미국에게 FTA 제시

□ 주요국 기업의 대응전략

- (투자진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미국 현지진출 확대

< 주요기업 미국 현지진출 계획 >

국가	기업	업종	내용
프랑스	LVMH	화장품	캘리포니아, 캐롤라인주 공장 신설 발표
	Total	석유	수증기 분해시설 합작투자 계획 발표, 17억 달러 투자
이탈리아	FCA	자동차	미국 공장에 10억 달러 투자, 2,000명 고용
대만	포모사	석유화학	공장 확충·신설에 144억 달러 투자
	폭스콘	LCD	70억 달러 규모 공장 설립, 3~5만 명 고용

- (통상 정책) EU, 미국이 국경조정세 도입 시 WTO 제소로 맞서겠다는 등 강력 대응 예고, 역외국과의 FTA 체결로 경제영토 확장
- (환율 정책) 미국의 비난과 상관 없이 기존 양적완화 정책을 고수와 독자적 환율 정책 유지

□ 통상정책

① 미국 국경조정세에 대해 WTO 제소 가능성

- 현재 미국에서 추진중인 국경조정세가 실제 도입될 경우, EU는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음.
 - * EU 집행위 부위원장, 국경조정세 시행으로 미국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EU는 WTO 제소를 통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2.14)
- EU의 WTO 제소 시 국경조정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EU는 트럼프와의 합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② 역외국과의 FTA 체결 가속화

- EU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역외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 중
 - * EU 집행위, 미국과의 TTIP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나 미국 외 무역협정이 체결 가능한 수많은 국가들이 있다고 밝힘.
- EU는 현재 TPP 가입국들과의 양자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 멕시코, 메르코수르와 연내 FTA 타결을 목표
 - * EU에서 협상 또는 발효 추진 중인 TPP 가입국가(8개국) :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 또한 EU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두고 일본, 메르코수르, 멕시코와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

< EU의 FTA 협상 추진 현황('17.4 기준) >

지역	현황
아시아	· 인도(직전 협상: '13.5월) · 말레이시아(직전 협상: '12.4월) · 태국(직전 협상: '14.4.10 4차 협상) · 일본(17차 협상 '16.9.30) · 중국 투자협정(12차 협상 '16.9.26) · 미얀마 투자보호협정(4차 협상 '16.12.16) · 필리핀(1차 협상 '16.5.27) · 인도네시아(2차 협상 '17.1.24~27) · 뉴질랜드('15.10.29 협상개시 합의) · 호주('15.11.15 협상개시 합의)
CIS	· 러시아('10 신RCA 협상 중단)
북미	· 미국(15차 협상 '16.10.7) · 멕시코(GA, 2차 '16.11.25)
중남미	· MERCOSUR(16차 협상 '16.10.14) · 볼리비아(Andean Community)(협상검토 중)
중동	· 시리아('04 AA협상 완료, 서명 보류) · 튀니지(DCFTA 1차 협상 '16.4.21) · 모로코('14.7.9 DCFTA 4차 협상) · 이집트(직전 협상: '13.6월) · 요르단(DCFTA 협상 준비)

□ 환율 정책

① (기존 통화정책 유지) 양적완화 정책 유지

- (환율정책 변동 불필요) 드라기 총재는 ECB를 통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할 의지
- * '17년 금리 동결, '18년 4월경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② (미국 주장에 반박) 미국의 환율조작 비난 논리에 반박

- (ECB) 트럼프의 독일에 대한 환율조작국 비난에 대해 반박하고 트럼프의 금융 통제완화에 대해 비판

* 드라기, “우리는 환율을 조작하지 않으며, ECB의 양적완화정책은 유로존 내 경제의 상이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힘

- (통상 정책) 미국과의 양자 FTA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대미 투자 지원 적극 지원 및 인도·인도네시아 FTA 협상 등으로 대응
- (환율 정책) 미국이 환율관찰국으로 지정했으나 유로화 대비 환율변동성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 통상정책

- 스위스 중앙정부는 미국과의 양자간 협정 등 대 미국 통상정책은 아직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 * '06년 마-스 FTA는 농업시장 개방문제로 기 부결된 바 있으며, 현재 재추진 계획 無
 - * TTIP와 등 다자간 협정이 추진될 경우에는 스위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의견
- 현재 인도네시아, 인도와 FTA 협상 중
- 스위스 기업의 대미 투자 지원
 - 스위스 무역투자진흥청(S-GE)의 미국 사무소(Business Hub USA)를 통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조사, 컨설팅 및 투자진출을 지원
 - * 스위스의 대미 투자는 누계 2,240억 달러에 달하며 이로 인해 창출된 미국 내 일자리 수는 46만 개 이상임.

□ 환율정책

- 중앙은행(SNB)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수출경쟁력과 무관하게 스위스 프랑의 고평가 대처 및 환율 변동성의 안정화가 주 목적
 - * 기준금리와 3개월 Libor를 각 -0.75%, -1.25~-0.25%로 동결
 - * UBS는 기준금리는 '18.6월 경 -0.5%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 스위스 금리는 ECB의 통화정책과 유사함으로 당분간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유지 예정
- SNB는 스위스 프랑과 유로화의 환율에 집중, 미국이나 달러화에 대한 적극적 조치는 취하지 않음.

3 캐나다

- (통상 정책) 미국 유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지속할 의도, CETA 체결 후 EU와의 교역 증가할 전망
- (환율 정책) 캐나다달러 가치상승으로 미국과의 환율마찰은 없음

□ 통상정책

① 미국에 관세 부과 등 무역전쟁 불사

- 캐나다, 미국 유제품에 관세 부과 및 미국과의 무역분쟁 대책 태스크포스 가동, 미국과의 '무역전쟁' 불사 예고
- 미국 정부를 상대로 통상법을 통한 법적 대응, WTO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전망
- 미국, 캐나다의 통상정책을 공식적으로 강하게 비난(4.25), 캐나다산 소프트우드 목재에 20% 상계관세 부과하는 등 무역전쟁 전선 확대

② EU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시장다변화 지속

- EU와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체결했으며, 금년 하반기 정식 발효 예정
- CETA가 발효되면 EU-캐나다의 무역규모가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EU는 캐나다의 2위 교역 대상처(수출: 283억 달러, 수입: 352억 달러)

□ 환율정책

- 캐나다는 미국이 지정한 환율관찰국에 포함되지 않아서 금리 조정 등 금융 정책 수립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 국제 유가 회복과 수출 증가에 따라 캐나다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미국과의 마찰이 적을 것으로 전망
- * Scotia Bank, '17년 캐나다 달러화가 US\$ 0.8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

- (통상 정책) 미-중 관계 악화를 활용해 미국과 FTA 추진, 대미투자 강화 등으로 미-대만 관계 개선 희망
- (환율 정책) 미국 환율대상국 지정을 의식하여 외환시장 개입 최대한 자제

□ 통상정책

- ① (미-대만 FTA) 양자협정을 선호하는 미국측 접촉, 미-대만 FTA 제안
 - 대만경제부, USTR과 무역투자협정회의(TIFA) 개최('16.10), TIFA 기반 양자투자협정(BIA) 및 FTA 체결 희망
 - 올 1월 美 TPP탈퇴로 대만 정부는 양자간 협정 기회가 커진 것으로 기대
 - 차이잉원 총통, 美 국무부 부차관보에 양국 FTA체결 지지 요청('17.1)
- ② (대미투자 강화) 민간기업 대규모 투자 계획
 - 반도체, LCD 분야에서 미국 현지 공장 설립 계획
 - * 폭스콘, 미국에 70억 달러 규모 LCD 공장 설립 계획, 일자리 3-5만 개 창출
 - * 포모사, 비닐 플라스틱-프로필렌-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 원자재 생산하는 일관화 공장 설립, 144억 달러 투자 계획

□ 환율정책

- 최근 아시아 신흥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속에 대만달러 강세
 - 올해 대만달러는 미 달러 대비 7.7% 상승
- 수출 타격 우려 속에도 환율조작국 지정 및 보호무역정책 우려,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며 대만달러 가치 상승을 받아들임.
- 기준금리를 동결, 3분기 연속 1.375% 유지('17.3)

5 베트남

- (통상 정책) RCEP를 통한 ASEAN+1 FTA 개선 효과, EU-FTA로 인한 유럽시장 진출 등을 통하여 TPP 무산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
- (환율 정책) 동화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환율시장 적극 개입

□ 통상정책

- 미국,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에 대한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음
 - 따라서 베트남 정부 역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함.
- 다만, 베트남 정부는 TPP 발효 여부와 관계 없이 글로벌 경제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
 - TPP의 대안으로 RCEP에 적극 참여, ASEAN+1 FTA 개선 및 규범의 조화를 통한 직간접적 효과 기대
 - EU와의 FTA를 ' 18년 발효할 수 있도록 총력, 발효 시 베트남의 2위 수출시장 EU 수출확대 전망

□ 환율정책

- 동화의 평가절하를 막기 위한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시장개입 및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
 - SBV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중은행을 통한 달러화 수급 조절과 투기적 달러수요 억제 및 달러화(dollarization) 방지를 위한 외환정책* 등을 일관적으로 추진 중.

* 달러화 예금에 대해 0% 금리 적용('15.12.17 부), 기준환율 매일 고시('16.1.4 부)

6 태국

- (통상 정책) RCEP, EU-FTA를 적극 추진하고 ASEAN, 동북아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TPP 무산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 미국산 무기 구입을 통해 대미 흑자 감소 노력
- (환율 정책) 변동환율정책을 유지하며 외환시장 미 개입 강조

□ 통상 정책

- ① (TPP 대체 무역협정) RCEP, EU와의 FTA 가속화, 기존 파트너십 강화
 - (EU와의 FTA) ASEAN은 2013년 초부터 EU와 FTA 체결을 추진, 최근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발표(3.10)
 - (RCEP) TPP 결렬로 태국은 약 172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되며, 대체 수단으로 RCEP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태국은 FTA에 의존하기보다 잠재적 동반자인 ASEAN 국가 및 한국·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집중할 전망
- ② (대미적자 해소 노력) 미국산 보잉기 및 무기 수입 증가
 - 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보잉기와 무기 수입을 늘릴 예정이라 밝힘
 - 태국의 대미 수출품은 주로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이거나 내부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향후 태국의 대미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환율 정책

- 태국은 변동 환율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바, 특정 환율 범위를 타깃으로 하지 않으며, 태국을 포함한 신흥 시장의 환율은 내부적인 요소보다는 미 연준의 정책 등 주로 외부요인에 의하여 변동
- 태국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정책금리를 종전 1.5%로 유지하기로 결정(3.29)



작성자

◆ 워싱턴 무역관	이정민 차장
◆ 베이징 무역관	김윤희 차장
◆ 도쿄 무역관	이세경 과장
◆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박소영 과장
◆ 멕시코시티 무역관	박민정 과장
◆ 브뤼셀 무역관	김도연 과장
◆ 취리히 무역관	남기훈 과장
◆ 토론토 무역관	주영도 과장
◆ 타이페이 무역관	박지현 대리
◆ 하노이 무역관	한경준 과장
◆ 방콕 무역관	김소선 과장
◆ 시장조사팀	강환국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7-018

트럼프 취임 100일과 美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7년 5월 2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시장조사팀
 (02-3460-7591)

ISBN : 979-11-6097-260-3(95320)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트럼프 취임 100일과
美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Global Market Report